

(270 ,
'93.1.7) .

1994 . 6.

: 1993.1.7(270 , 1993.4.3)

1 () (" ")
3 2

， .
． ． (" ")
， (，
．)
，
．

2 () 1

.

1.

2.

가

4

가

3.

,

3

(

)

,

,

9

12

.

4

(

)

.

.

.

.

.

,

,

.

1

(

가

.

가

.

.

.

)

가

,

.

5 ()

가 2 1

1

,

· ,

2 가

·

1.

가. 6 5

5,500

· 6 3

7,500

· 6 4

10,000

, 가. ·

10,000

2.

가. 15 1 4 가

7,500

. 15 1 4

10,000

3.

가. 5

2,500

4.

가. 18 1 2

7,500

, 8

.

. 21

6 () 4

5 15

(, , ,)

.

1,000

,

.

7 () 4 6

,

.

4 6

,

9

.

8 ()

.

9 () 4

6

.

1. . .

2,

가.

. (,

)

.

.

.

3.

. .

4.

가. (1 : 25,000)

. (1 : 3,000 1 : 5,000)

.

1

가

.

,

,

가

.

10 () ,

30

.

9 2

11

가

1

,

가

90

가

.

11

(

가

)

,

10

가

19

가

24

2

가

가

.

12

(

)

가

10

.

가

,

.

.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처 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환경처 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	○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 명칭 변경
제2조 (적용배제) 민간부문의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계획 또는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등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1. 민간부문의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준용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여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신 설 〉</p> <p>제3조 (행정계획의 협의) ①지역종합개발·산업·교통·관광·에너지개발·농림수산정책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수립의 최초 단계에서 부터 환경보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동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 (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토지의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또는 개발예정지의 지정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p>	<p>제3조 (절차등의 준용) 행정계획 또는 사업의 집행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그 협의절차등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행정계획의 협의) ①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② 행정계획에 대하여 승인(승인에 준하는 인가, 허가, 결정, 확정, 지정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당해 계획에 대한 승인전에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과 제5조(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p>	<p>○ 현행 제2조의 준용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p> <p>○ 승인·인가·허가·확정·결정·지정등을 "승인등"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사업자 자신이 확정·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므로 "승인등" 범위에 확정·결정도 포함되도록 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 신 설 〉</p> <p>제7조 (지침등의 작성) 환경처장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행정계획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지침 및 전국의 중요하거나 취약한 생태계의 분포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8조 (구비서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지정 등의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 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p>	<p>② 제4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사업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서류와 함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p> <p>제8조(지침등의 작성)</p> <p>〈 현행과 같음 〉</p> <p>제9조 (구비서류) ① 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제4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추진배경·</p>	<p>○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등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할 때 사전협의 서류를 함께 제출, 사업성과 환경성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p> <p>○ 환경처장관에게 협의요청은 승인기관의 장이하고 환경성검토서류는 승인신청자가 제출토록 함에따라 행정절차의 번잡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서류제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환경성검토서류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함께 제출되는 것으로 함)</p>

현행	개정 (안)	비고
<p>2.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의 기본자료</p> <p>가.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p> <p>나. 생태적 특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등)</p> <p>다. 상주예상 인원</p> <p>라.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p> <p>마. 기타 당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p> <p>3. 사업계획추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대기, 수질 및 소음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및 소요비용</p> <p>4. 다음 각목의 세부도면</p> <p>가. 위치도 (축척 1 : 25,000인 지형도)</p> <p>나. 토지이용계획도 (축척 1 : 3,000 내지 1 : 5,000)</p> <p>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도</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지정 등의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당해 사업집행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구비가능한 서류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다만, 검토에 특히 필요하여 환경처장관 또는</p>	<p>다. 예상 상주인원</p> <p>3. 자연생태계·대기·수질 및 소음등에</p> <p>②..... < 삭제 ></p> <p>..... 제출할 수 있다</p> <p>.....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p>	<p>ㅇ 용어정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지방환경청장의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9조 (협의기간) ①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보완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기간은 제1항의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환경처장관과 지방환경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시작부터 협의완료까지의 전체기간이 가능한 한 90일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 (전문가의 기술자문)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환경성 검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영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지방환경관리청장이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p> <p>제10조(협의기간) ①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p> <p>② 제9조제2항의 제11조의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p> <p>제11조 (전문가의 기술자문)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0조</p>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11조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결과를 당해 행정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기에 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2조 (협의결과의 이행) ① 제10조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협의결과를 승인하기 전에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용어정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 <u>상기 가. 내지 라.의 지역에서 확장장·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1,000미터 이상)</u></p> <p>2. 도시계획법 적용지역</p> <p>가. <u>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750미터이상)</u></p> <p>나. <u>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1,000미터이상)</u></p> <p>3. 수도법 적용지역</p> <p>가. <u>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2,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250미터이상)</u></p> <p>4. 산림법 적용지역</p> <p>가. <u>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행위중 그 전용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경우 750미터 이상)</u> 다만, 그 적용지역의 범위는 <u>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의한 유보지역과</u></p>	<p>라. <u>상기 가. 내지 다.의 지역에서 확장장·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u></p> <p>2. 도시계획법 적용지역</p> <p>가. <u>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u> <u>.....(삭제)</u></p> <p>나. <u>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u> <u>.....(삭제)</u></p> <p>3. 수도법 적용지역</p> <p>..... <u>..(삭제)</u></p> <p>4. 산림법 적용지역</p> <p>가.(삭제) 다만, 그 적용지역의 범위는 <u>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되지</u></p>	<p>○ 노선의 경우는 제외</p> <p>○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유보지역 삭제 및 조문 정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실시하는 다음 사업의 경우에는 승인(승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인가·결정등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승인 또는 지정전에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이 2개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아야하는 승인 또는 지정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p> <p>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1,000미터 이상)</p> <p>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7,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750미터이상)</p> <p>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5,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550미터 이상)</p> <p>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5,500제곱미터이상인 것(노선의 경우는 550미터 이상)</p>	<p>경우에는 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기전에 환경처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승인을 승인의 전에</p> <p>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p> <p>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500제곱미터이상인 것</p> <p>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안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인 것</p> <p>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 삭제 ></p>	<p>○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용도지역이 10개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조문정리</p> <p>○ 노선의 경우 폭에 대하여는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길이로만 규정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할 뿐아니라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외 예) 전기, 통신선로등의 공사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p>